

광주시 4대 공기업 인사카드 손질

“인사기록카드 서식이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시민단체 주장에 광주시 4대 공기업이 논란이 조항은 삭제하거나 삭제키로 하는 등 인사카드 손질에 나섰다.

4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시 인권옹보즈 맨은 지난달 30일 학벌없는 사회 측이 제기한 진정 사건에 대한 결정통지문을 통해 “광주시 산하 4대 공기업이 인사기록카드의 인권침해 요소를 지방적으로 삭제하거나 삭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력 사항은 물론 신체, 가족관

‘학벌없는 사회 시민모임’ 진정 공기업들 응답

학력·신체·재산 내역·정당·종교 등 삭제

계, 재산, 병역, 정당·시민단체, 종교 등 신상 정보를 모두 기재토록 한 것은 인권침해고, 학벌주의와 학연·지연 관행화, 수치심 유발 등의 문제점도 알고 있다”고 진정서를 제출한 지 1년1개월만이다.

결정통지문에 따르면 광주환경공단은 학교명과 신장, 체중, 가족 학력, 재산사항, 종교 등을 삭제했고

도시철도공사는 출신 학교, 신장, 체중, 시력, 혈액형, 가족 학력과 직장을 삭제했다.

또 도시공사는 신장, 체중, 시력, 혈액형, 가족들의 학력과 직업, 재산 내역, 병력, 역종과 군번, 정당이나 사회단체, 종교단체를 기입 대상에서 삭제했고, 김대중컨벤션센터는 전공과 학위, 신체사항, 가족 학력

과 직장, 재산 내역, 병과 계급, 정당·시민단체·종교 등을 삭제했다.

학벌없는 사회 측은 “인권침해 기록을 통해 평판인사를 불식시키고, 합리성과 객관성·투명성이 강화된 인사관리가 이뤄지는 한편 학력적인 기준에 따라 인사하는 원칙이 공직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이며 “직무능력 중심의 인사가 공직사회에 정착되면서 인사혁신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인호 기자

광주·전남 타워크레인

103대 점거 농성 돌입

광주·전남지역 건설노동자들이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며 타워크레인 점거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4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광주·전라 타워크레인지부에 따르면, 노조원들은 지난 3일 오후 5시부터 광주·전남지역 건설현장 48곳(광주 26곳·전남 22곳)에 설치된 타워크레인 103대를 동시 점거하고 고공농성을 돌입했다.

이들은 “소형 무인 타워크레인은 한 번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가 나는 장비”이며 “지난 2014년부터 건설기계로 정식 등록되기 시작한 소형타워크레인은 명확한 재원 기준도 없어 불법 개조를 하고 허위 등록돼 건설현장에서 쓰이고 있다. 더욱이 국가자격 없이 20시간 교육만으로 허가를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장비를 운행할 수 있어 위험하다”고 밝혔다.

이어 “소형 타워크레인은 명확한 건설기계 등록 제원 조건도 없고 불법 개조된 장비들이 지난 4년 동안 30건의 사고가 발생했지만, 정부는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부는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해 왔다. 건설사들은 사실상 정부가 장려하는 소형 타워크레인을 현장에 설치했고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은 고용 위기에 내몰렸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임금·단체협약 교섭 과정에서도 사측은 임금 동결을 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요구사항도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은 고수해왔다”며 “시작은 성실히 교섭에 임해야 하고 정부는 노동자 안전을 위해 소형 타워크레인을 철폐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남규 기자



신나는 모내기 체험 4일 오전 경기 수원시 권선구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종부작물부 작물연구동에서 어린이들이 손모내기 체험을 하고 있다.

‘1000원 이하 vs 2000원도 빠듯’ 담양 메타길 입장료 공방

답양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입장료 징수 문제와 관련해 법원이 적정 가격으로의 인하를 권고한데 대해 담양군이 “현재도 빠듯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 법적 공방이 기울될 것으로 예상된다.

4일 담양군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3민사부(부장판사 김성호)는 전날 A씨와 B씨가 담양군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메타세쿼이아길 입장료) 반환 소송과 관련해 “2000원 입장료를 1000원 이하로 조정하라”고 회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제판부는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가로수길 주위 다른 시설을 이용하려는 의사가 없는 여행객들로부터 같은 입장료를 받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장료를 이를 시일 안에 인하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담양군은 내부 논의를

거쳐 2주 안에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지만, “인간비와 관련비 등을 고려할 때 2000원도 빠듯하다”는 입장이어서 인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최형식 군수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애초 이 소송은 ‘입장료 징수에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었지만 법원이 해 당부지가 100% 규유지로 공공시설이고 조례도 있어 입장료 징수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적법성이 인정된 셈이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길 사용료를 받는 게 아니라 메타길은 물론 어린이 프로방스, 호남기후변화체험관, 허브센터, 영화세트장, 개구리생태공원 등에 대한 통합 징수”라며 “2000 원은 적정하고 인간비 관리비 등을 감안하면 오히려 빠듯하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

두고 소송이 제기됐는데, 다분히 선거전략적 측면에서 문제 제기가 이뤄진 것이고, 특정 변호인 단체가 공익성을 이유로 나선 것 역시 중립성을 훼손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시안은 양측이 회해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정식제판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답양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은 1972년 가로수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됐으며 2.1km에 걸쳐 487그루(평균 높이 30m, 수령 40년)가 심어져 있다.

답양군 학동리 일대에 조성된 메타랜드는 국비 200억원을 비롯해 총 429억원을 들여 메타길을 포함, 호남기후변화체험관, 어린이 프로방스, 영화세트장, 개구리생태공원, 에코허브센터 등이 들어섰거나 추진 중이다.

담양=박종영 기자

수단, 치안대 시위군중 공격 최소 30명 사망

수단에서 군부 통제의 치안대가 3일(현지시간) 수도 하르툼 도심에서 민정이양 요구 연좌 농성을 벌이는 시위대를 실탄으로 공격하면서 최소한 30명이 목숨을 잃고 수백 명이 다쳤다고 AP 통신 등이 보도했다.

매체는 시위 지도부와 수단 의사협회, 보격자 등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며 하르툼 시내 군기지 밖에 있는 농성장의 피해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에서 사상자 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수단 의사협회는 시민자와 부상자 대부분이 총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치안대의 습격을 받은 연좌 농성장은 국방부 및 대통령 관저 앞에 소재하며 4월6일부터 수단전문가협의회 주도의 맹렬한 반정부 시위가 펼쳐졌다.

수단전문가협의회는 치안대 발포로 인명피해가 늘어나자 이에 맞서 국민에 전국적으로 이간기두 시위에 기여해 주요 간선도로를 차단하고 촉구했다.

시위 주도자인 나짐 시르리자는 치안대와 시위대가 하르툼의 부리와 바흐리 지역, 인접한 옴두르민등에서 유혈 충돌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시위대가 퇴진을 요구한 오마르 비시르 전 대통령이 4월11일 군부에 의해 축출, 체포된 뒤에도 연좌 농성은 계속되었다.

과도 군사평의회는 이날 치안대가 시위 해산을 시도한 곳은 연좌 농성장 전역이 아니고 ‘불순한 모의’가 의심되는 특정한 장소에 한정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안토니우 구네호스 유엔 사무총장은 군부의 배후조종을 받는 치안대가 연좌 농성장을 공격한데 대해 강력히 비난했다.

스페인 대변인은 구네호스 사무총장이 치안대가 수단 민간인에 과도한 무력을 행사해 피해를 키웠다는 군부 당국이 이를 중립적인 차원에서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촉구했다고 전했다.

톈안먼 사태 30주년, 중국밖 추모 고조

6·4 톈안먼 시태 30주년을 맞아 중국 밖에서는 추모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4일 자유아시아방송 중국어판에 따르면 ‘홍콩시민자원애국민주운동연합회(지련회)’, 홍콩전주교정의와평화위원회 등 단체와 청년정당 네모시스토(香港眾志)는 공민당, 민주당 정당들은 망자와 미래를 위해 계속 싸우겠다는 제하의 공동 성명을 발표해 톈안먼 사태를 기념했다.

단체와 정당은 성명에서 “지난 30년 동안 우리는 (톈안먼 광장) 학살의 총소리를 기억하고 있고, 중국 당국이 지워버리려던 사람과 일들을 기록해 두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6·4사건에 대한 (우리의) 시정 요구는 가벼운 자평기가 아니라 공의와 진실에 대한 규명이고 학살자를 심판해 올리고 희생자와 피해자들이 거듭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보토와 홍콩의 민주화 운동 단체들은 상호 협력해야 하며 일당독재에 선전포고를 하고 망자와 공의 미래를 위해 힘을 합쳐 싸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대만 차이잉원 정부도 톈안먼 시태와 관련한 중국의 반성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대만의 중국담당부서인 대만대륙위원회는 3일 성명에서 “중국은 6·4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민주적 개혁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륙위는 또 “중국 정부가 톈안먼 시태를 은폐하기 위해 거짓말을 해왔으며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대만은 중국 본토를 위해 민주주의로 가는 방향을 계속 가리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은 이날 사망 뉴욕대 교수 등 해외 민주인사 대만 방문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민주화 길을 걸어온 대만과 달리 중국은 비록 경제적인 발전을 이루었지만 어렵게도 인권과 자유는 매우 많이 죽소됐다’고 밝혔다.

아프간서 공무원 버스 폭탄 터져 5명 사망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3일 버스에 장착된 폭탄이 터져 5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다쳤다고 AP 통신이 내부부 대변인을 인용해 전했다.

이날 버스 공격은 타고 있던 공무원들을 타깃으로 했다. 보건부 대변인은 이 같은 초기 사상자 수가 많이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탈레반과 이 조직에서 이탈한 이슬람국가(IS) 조직 모두 수도에서 적극적인 테러 공격을 하고 있다. 카불에서는 전날 일요일에 4건의 폭발물 공격이 펼쳐져 2명이 죽고 27명이 부상했다.

아프간의 399개 지역 중 100개 넘는 지역에서 아프간 전쟁이 시작된 지 18년째인 현재도 정부군과 탈레반이 치열한 다툼을 벌이고 있다.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미黍이는요...
자래치료중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놓았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일찌, 일찌해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더·분에
안녕이랑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영유아건강검진 증 자폐증기발전,
자발치료 중인 민예군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